현장과 시각

원산지표시 제대로 하라

이종태
경제부 부장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내줄 것 다 내주고 '검역주권'마저 포기했다"는 비난이 정부에 쏟아진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6월22일부터 100㎡(30평) 이상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의 경우 구이와 탕·튀김·찜·생식용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300㎡(90평) 이상에서 한층 강화한 셈이다.

그러나 100㎡ 이상 모든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전국 요식업소 57만3천639곳(2007년 2월 기준)의 20.5%인 11만7천743곳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실제 100㎡ 미만의 음식점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의 유통량이 상당한데, 이에 대한 단속은 어쩌란 말인가"라며 "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될 경우에도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규정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가벼울 뿐 아니라 위반사범에 대한 법원이나 검찰의 처벌이 대부분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6일 여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후속대책으로 부랴부랴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00㎡ 이상의 기준을 추가로 크게 낮추거나, 아예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아울러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학교와 직장, 군 급식소 등도 포함시키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누그러뜨리려는 일시 방편이건 아니건, 의무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자체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원이나 단속횟수를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산을 적발해내는 기기 및 시스템을 확충하지 않으면 원산지 표시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한농연 전남도지회 관계자는 "현재 한우만을 판별할 수 있는 DNA검사를 미국산까지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음식점주나 유통업주에 대한 처벌도 법령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tlee@kwangju.co.kr

美쇠고기 수입 '불똥' 한미FTA 비준 '비상'

5월 국회 처리 난망… 청와대 "美 압박 전략 차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청와대가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17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먼저 FTA 비준안을 처리해 미국 의회를 압박한다'는 전략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이고 18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바쁜 국회 일정 탓에 조기비준을 결코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불똥이 엉뚱하게 FTA로 튀면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FTA 비준안 조기처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쇠고기와 FTA를 연결시키며 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신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우리는 빨리 FTA를 비준해 미국 의회를 압박하자는 것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한나라당과의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대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도 이날 공식 회의석상에서 FTA 조기비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쇠고기 수입문제와 FTA 비준안을 연계시키지 말고 별개로 다뤄 달라. 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한 협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교육확대, 경제살리기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몰입해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피해분야에 대한 보상과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비준권을 가진 미국 의회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산업 대책을 보완하면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비준안 처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오는 13~14일 양일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빌 게이츠 "IT 글로벌 협력"

대통령 자문위원 수락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과 만나 IT(정보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게이츠 회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0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오는 7월 회장직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다 이번 방한에서 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의 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게 돼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게이츠 회장에게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을 제안했고, 게이츠 회장도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게이츠 회장이 최근 다보스포럼 등에서 주장한 이른바 '창조적 자본주의'를 언급, "따뜻한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도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의 혜택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에 밝혔던 '재산 사회헌납 계획'을 소개하면서 게이츠 회장 부부가 운영하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대한 관심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게이츠 회장은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고 경제활력을 적극 제고하는 새 정부의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자신의 재단 운영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도 양극화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할 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게이츠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향후 5년간 차량 IT, 게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총 1억4천7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6일 미얀마 양곤의 거리가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뿌리채 뽑힌 나무들로 인해 폐허로 변했다. 사이클론으로 인한 희생자수만 현재 1만5천명이 넘고, 이재민 수도 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한 마을서 1만명 몰살

사이클론 피해 확산… 최소 1만5천명 사망 3천명 실종

미얀마 서남부 지방을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망자만 최소 1만5천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의 한 마을에서만 1만명이 몰살되는 등 전체 희생자 수가 1만5천명에 달한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니얀 윈 미얀마 외무장관은 이날 국영 TV에 출연, "이라와디 삼각주의 보가레이(Bogalay) 한 마을에서만 1만명이 숨졌다"면서 총 희생자 수는 1만5천명으로 추산되지만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1만명이 숨지고 3천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었다. 이재민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엔 구호요원들은 이재민 수가 수백만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피해가 확산되자 미얀마 군정도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미얀마 군정이 외부 지원을 환영하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얀마 군정은 2004년 쓰나미(지진해일)가 동남아시아를 휩쓸었을 때에도 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미얀마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WFP 등 구호단체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EU)도 200만유로(300만달러)의 긴급 구호금 지원을 약속했고 인도와 태국 등 인접국들도 구호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답지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의 현장 접근이 어려워 구호품 전달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피해 상황이 2004년말 인도양 쓰나미 때보다 심각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구 500만명의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에서는 4일째 전기가 끊겼으며 거리에서는 생수를 얻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오늘 中-日 정상회담

후진타오, 장쩌민 이후 10년만에 방일
교환방문 정례화·양국관계 강화 합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을 방문했다.

그의 방일은 2003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지난 1998년 장쩌민 주석에 이어 10년만이다.

후 주석은 7일 오전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이후 네번째가 되는 중일 공동문서와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후 주석은 아키히토 일왕도 예방한다.

후 주석은 방일 첫날인 6일 오후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쑨원이 자주 찾았던 도쿄도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후쿠다 총리 주최 비공식 만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어 중일 공동성명에 서명했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장녀인 다나카 마키코 중의원 의원 등 중일관계 발전에 힘을 쏟았던 고인의 가족들을 면담했다.

중국과 일본은 7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공동문서에서 양국 관계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자는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상들의 교환방문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돌파구는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협력을 골자로 하는 특별문서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